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화 과정 필요”

-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안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 정책은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 뿐 아니라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사개위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 정책 결정과 관련해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책임자	과 장 김아람 (02-2100-2084)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02-2100-2283)

반도체 산업 정책,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다. 동시에 전력수급,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단순한 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과 국토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결정된 국가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국회와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구조는 없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산업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 뿐 아니라 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부담 역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직결된 과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반도체산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쟁점을 수렴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따라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의 자문기구로서 공론화로 가는 길목에서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여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2026. 06. 22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